

## 매일 매일 적정 시간 일하는 사회로

유청희 아시아과로사감시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한국에서 노동시간은 점차 단축됐다. 주 48시간 노동에서 주 40시간 노동으로 변경된 역사가 있다. 한때 1주를 5일로 보고 평일 노동 40시간과 1주 추가 노동 12시간, 그리고 휴일 노동 16시간까지, 7일간 총 68시간 업무가 가능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1주일은 7일이라고 법에 명시했고, 1주 12시간 이상 추가 노동을 하지 못하게 정했다.

노동시간이 이렇게 단축되었지만,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제도는 여전히 많다. 추가 노동시간을 사전에 약정해두는 포괄임금제, 건강에 치명적이지만 법상 규제조차 없는 야간노동 등 말이다.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 총선 시기 노동시간 단축이 공약으로 나오는 요즘, 총선이 지난 후에도 제도의 구멍을 메워갈 것이 많은데, 노동자에게 필요한 노동시간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

하루 연장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문제, 1주 상한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이 기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 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흐름이자 요구다. 2022년 대선 시기 주 4일제 노동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최근 총선을 앞두고도 주 4일제 노동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극심한 장시간 노동,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 등 노동자 삶의 존엄을 파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 4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 4일제 노동을 이야기할 때, 하루를 더 쉬는 대신 하루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건강한 노

동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한국의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주 4일제나 주 4.5일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주일에 4일의 노동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연장해 일하고 하루를 더 쉬는 식으로 주 4일제, 주 4.5일제가 실시되는 방향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는 하루하루 적정 시간 노동하고 충분히 쉴 수 있게 하는 데서 살릴 수 있다. 노동자들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식의 주 4일제 실시가 우려가 된다. 하루 10시간씩 노동하고 4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과 총 노동시간을 모두 줄이는 방향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주 4일제가 되는 것 아닐까?

게다가 주 4일제 논의는 주로 주 5일, 40시간 정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중심이라는 점에서도 아쉽다. 초단시간 노동자, 교대와 야간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 등 노동시간과 삶의 질의 양극화 문제를 생각한다면, 논의의 중심이 옮겨져야 하지 않을까?

## 장시간·불규칙, 야간노동을 방치하지 않는 사회

오래된 문제지만 새롭게 살펴보고 규제해야 하는 제도가 여럿 있다. 포괄임금제는 소정 노동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시간을 사전에 약정하고 예정된 수당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특성상 노동시간 계산이 어려운 업종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계산이 가능한 영역에서도 이 제도 사용은 흔하다. 게다가 공짜노동 문제와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주는 포괄임금제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 출근한 날 퇴근하지 못하고 출근한 지 며칠 만에 퇴근하는 IT 업계 노동자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는 야간노동도 있다. 2007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했다.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우울증, 소화력, 흡연까지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다. 최근,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확산했고 그 시장에는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루 배송, 새벽 배송은 우리 삶을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노동자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은 지워져 버렸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더욱 확산하여 경각심도 사라진 야간노동에 제동을 걸 때다.

2023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개편 시도와 하루 연장 노동시간 제한은 없다는 대법원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등, 노동자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 있다. 그런 시도에 맞서 과로로 노동자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노동시간 단축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 